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3/ 29 통권 161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에게 판시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운종 회계사:  
2022년 회계감리·재무제표심사결과 주요지적사례  
(금감원)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업무성과관련 포상여행이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는 비용인정 안됨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지방세입 관계법령」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23년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  
니다.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  
리 강화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합병시 장부 반영한 회계상 영업권(단순차익)은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재난지원금·고용지원금·사업상손실보상금 등의 과세여부〉

보상금 유형	개인직접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론	특별열거 직접수급분 비과세	수입손실상응은 수입가산, 비대응은 수입제외 (열거주의)	순자산 증가설로 원칙적 익금산입임
긴급 ·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법)	비과세	수입합산후 급여비 용지급(비과세)	익금산입 → 비용(비과세)
근로자고용유지지원 (직접지급)	직접지급, 과세 아님	수입합산후 비용인정(비과세)	익금산입 → 비용지급(비과세)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비과세	총수입합산 → 비용처리(과세임)	익금산입 → 비용처리(과세)
코로나 피해 고용안정특별지원금	비과세	직원에 직접 지급 (비과세)	익금산입, 급여비용(비과세)
재난지원금	비과세	개인직접지급됨 (비과세)	개인직접지급됨 (비과세)
사업보전지원금	해당안됨	총수입금 합산⊕	익금산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비과세	비과세(수입금 미산입)	익금불산입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해당안됨	수입제외	익금불산입
영업손실보상	· 손실까지 비과세 · 손실초과액은 기타소득	수입가산 - 손실비용 대응	익금산입 - 손실상응 비용인정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6호 / 주간 13호

2023. 03. 29.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재난지원금 · 고용지원금 · 사업장손실보상금 등의 과세여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2022년 회계감리·재무제표심사결과 주요지적사례(금감원)	2
C E O 에 세 이	CEO에게 편사는 없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GCF UN산하 국제환경단체 (비영리단체) 면세 매출 - 영화티켓 부가세 문의 - 당직비 비과세 관련 - 사원복 로고 부착 -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 회계처리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업무성과관련 포상여행이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는 비용인정 안 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	9 10
직 장 인 Survival	변치 않는 5가지 성공키워드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동산-3267, 2022.08.23) -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 에 의하여 어업권 · 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 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와-1815, 2022.08.16)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60%→80%로 상향...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 진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합병시 장부 반영한 회계상 영업권(단순차익)은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12
세 무 정 보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23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15 20 31 38
노 무 정 보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 · 납부해야	4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 2022년 회계감리 · 재무제표심사결과 주요지적사례(금감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1.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 : 실물재고 이동 없이, 장부상 재고입출 반영만으로 매입과 매출을 동시 과대반영
2. 수익조기인식으로 매출과다계상 : 거래상대방 승인 · 확인없이 밀어내기 매출인식, 매출세금계산서 선발행
3. 횡령과 금융자산손실 과소계상 : 임직원 등이 유상증자대금 등을 횡령 후, 금융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으로 허위반영계상
4. 금융자산 과대반영 : 대표이사와 가족 등의 횡령금액을 금융자산으로 변칙반영
5. 유형자산 허위계상 : 당기비용성 외주가공비나 연구개발비 등을 자산으로 과대반영, 미상각함.
6.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실 미반영 : 부실회사를 고가로 인수하여 차액 대부분을 횡령하고 자회사, 관계회사 계정 반영함.
7.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반영 : 재고 유효기간 경과된 자산반영, 완제품 제조불가능 ·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으로 반영 등
8.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미반영 : 지분의 우회취득 등으로 형식적 지분은 작으나, 회사의 경영을 실질 통제하는 은닉주주와의 거래내역을 미공시함.

# CEO에게 판시는 없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생각해보면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 한국의 한계기업 입장에서 보면 하등 중국인들에게 허풍떨거나 으시댔 근거가 없다. 또 싸고 풍부한 자원을 갖고 오는 비즈니스도 한국인의 입장이 더욱 긴요한 일이다. 따라서 평등한 자세로 서로의 이해를 맞추며 실리를 쌍방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간의 접대의 교환은 불가피한 인간관계의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돈 쓰는 일에 무책임한 중국관료와 싼값이라는 이점을 악용해서 쾌락을 만끽하면서 판시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처신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쁜 이미지만 뒤집어쓰고 신용이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귀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판시는 표피적인 접촉이 아니다. 치졸한 접대가 판시는 아니다. 그런 판시는 없다.

‘중국 최고부자’로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했던 동팡시왕(東方希望)그룹의 류용싱(劉永行)회장의 체험적 판시론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판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동팡시왕은 1982년 쓰촨(四川)성에 살던 류회장 4형제가 1천위원의 돈으로 시작한 기업이다. 당초에는 병아리를 키우는 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1년 동안 8만마리의 병아리를 팔아 10만 위안을 벌었다. 이후 그들은 메추라기 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1988년 이들은 사료업에 뛰어들어 시왕사료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중국에 사료를 공급하던 태국의正大(正大)그룹은 비싸게 사료를 팔았다. 시왕사료회사는正大그룹보다 싼값에 사료를 생산·판매했다. 당연히 성공했다. 이들은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로 사업기반을 옮기고 오늘에 이르렀다. 첫째 류용엔은 전자·첨단기술업을 주로 하는 다루시왕그룹을 경영했고, 둘째 류용싱은 사료·알미늄업을 주로하는 동팡시왕그룹을, 셋째 류용메이는 부동산·호텔업을 주로 하는 화시시왕그룹을, 넷째 류용하오는 금융·사료업을 주로하는 신시왕그룹을 이끌면서 대성공을 이루었다.

그들의 중심인물인 류용성 회장의 말이다. “판시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편리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기업문화와 앞선 경영방식 그리고 선진기술 등에 있다. 시왕그룹은 쓰촨성 시골에서 창업했고 의지할만한 판시도 없었다. 우리는 관료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고 판시에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대정책을 받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판시가 좋아진 것이다. 정부가 우리기업을 믿고 우리의 경영방식과 발전 전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의 BBQ와 공동으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 들었던 이유도 BBQ와의 ‘술 취한 판시’때문이다. 시장의 가능성과 BBQ의 차별적 경영방식 때문이다.

“중국엔 아직 배달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이 잘돼야 본사도 잘 된다’는 BBQ의 경영이념이 마음에 들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17일 (금)	3월 20일 (월)	3월 21일 (화)	3월 22일 (수)	3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312.10	1303.60	1308.40	1307.80	1307.10
일	본 엔 (JPY)	983.40	987.09	996.00	988.62	994.94
영	국 파 운 드 (GBP)	1588.69	1587.85	1606.58	1598.13	1603.81
캐	나 다 달 러 (CAD)	956.27	949.80	957.34	953.73	952.18
홍	콩 달 러 (HKD)	167.15	166.09	166.85	166.69	166.57
중	국 원 (CNH)	190.10	189.26	189.84	190.05	189.92
유	로 화 (EUR)	1392.79	1390.94	1403.00	1408.63	1419.77
호	주 달 러 (AUD)	873.60	874.52	879.24	872.43	874.52
싱	가 폴 달 러 (SGD)	974.56	972.22	978.28	978.01	982.8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1.32	290.63	291.66	292.41	293.40

## GCF UN산하 국제환경단체 (비영리단체) 면세 매출

**Q** 호텔에서 GCF 행사 매출이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 구분을 제 24조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야 할지 면세사업매출로 해야할지 면세매출 구분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용역의 경우라도 귀사가 질의에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화티켓 부가세 문의

**Q**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영화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이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영화 티켓의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권 등은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당직비 비과세 관련

**Q** 당직비 비과세 가능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직비를 비과세하려면 1. 사규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하고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직비에 대해 사규에 해당 수당의 지급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액은 "별도기안" 참고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금액은 평일 20만원 / 주말 40만원으로 "별도기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별(부서별)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별도기안"으로 대체되어 구체적인 금액이 사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괜찮은지 /  
당직비 지급기준과 금액이 과별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A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별도기안 등에 표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과별 차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범위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한 경우 해당 결정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추후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  
지고 금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 회계처리

Q

인터넷쇼핑몰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고객들에  
게 제공하면(이벤트성으로 당사계약과 상관없이 진행됨), ~월분 쿠폰으로 마이너스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와관련해서 계정과목(회계처리)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A

최초 공급시점부터 할인해서 공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  
가 발급한 쿠폰이 아니고 판매대행업체가 발급한 것이라면 매출감액이 아닌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업무성과관련 포상여행이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는 비용인정 안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법인의 사업(업무)과 관련이 있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한도내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지출 또는 비용)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이나 직원의 해외여행 관련 여비도 무조건적으로 손금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해외여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및 업무성과 관련 포상여행은 손금불산입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나 해외연수비 등의 해외여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다.

또한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게 포상차원에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비용을 법인의 비용이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특정 해외여행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의 여부는 여행을 떠나기 전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업무관련성이 아닌 실제 여행지에서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한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외여행에 따른 지출증빙의 수취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의 경우 항공료는 항공권이면 되고, 숙박요금이나 식대 등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수취의무가 없지만,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하지만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여행사에서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교통비·숙박비 등의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나머지 비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 재소비-34, 2006.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관련성의 판정

임직원의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판단은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이나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여행이라도 여행사 등의 패키지 상품 등을 이용해 다녀온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서이46012 - 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 - 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 - 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물론 해외여행을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다녀왔더라도, 그 여행기간 중의 여행지, 수행업무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왕복 교통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만 적용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R&D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최저한세



### 새로 추가된 세금 혜택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디스플레이	AMOLED, 마이크로 LED, 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등
신성장 사업화시설	탄소중립	극저온 화물창 · 해저케이블 · 미활용 폐열 발전 시설
	에너지 · 환경	SMR 관련 제조시설



## 주택분 중부세율 현황

- 중부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 12억원으로 상향
- 기본공제 : 6억 → 9억으로 상향(1주택의 부부공동명의자  $9 \times 2 = 18$ 억원)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표준	(2021~2022년)		개정 (일반세율)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6%	3.6%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기획재정부)



## 연금저축 인출 · 해지시 세율

- 일반적 사례 : 세율 16.5%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는 사례 : 세율 3.3~5.5%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 개인회생
- 해외이주 혹은 사망
- 천재지변



## 변치 않는 5가지 성공키워드

### 1. 자기 변화를 위해 실천하라.

자기 변화에 적극적인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확률도 높다.  
자기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하라.

### 2. 자기만의 비전을 가져라.

비전(Vision)이란 높고 올바른 꿈을 말하며, 원대한 목표이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술, 신용, 건강, 의지 등 여러가지 힘이 있어야한다.

### 3.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자  
최상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 4. 신념을 가져라.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신념으로 무장하면 강해진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에 안될 일은 없다'는 신념을 가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

### 5.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는 희망에 찬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며 성공의 길로 인도해준다.  
긍정적인 마음은 매일매일 겪는 실패나 패배조차 승리로 전환시키는 힘을 갖는다.

# 최신 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합병시 장부 반영한 회계상 영업권(단순차익)은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352, 2022.04.13

### ■ 질 의

-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 사업용 자산가액에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동산-3267, 2022.08.23

### ■ 질 의

- '03.10.16. 다세대주택 9호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 '03.10.17.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 '03.11.08.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 예정 임대주택 9호 양도 예정

### 질의

- 2003.10.17.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부동산-3387, 2022.08.10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에 의하여 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22.08.16

### ■ 질 의

- 조특령§99의2⑩에서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99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원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에서는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법」 등에서는 어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고,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 또는 분할받아 취득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승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에 의하여 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됩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중부세 공시가액비율 60%→80%로 상향...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를 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발표를 앞두고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중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중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중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할 계획이다.

###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관세청, 중소·중견기업 AEO 지원 확대 내용은?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도 동등하게 세무조사 부담 완화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O)와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간담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함과 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룹 내 관계회사 간 국내외 거래가격(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기획재정부, 2023. 3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 ❶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 투자세액공제율(%) 〉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❷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하이일드 펀드)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

※ (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③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국채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④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 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 종합부동산세법

### ①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금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참고 -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내용

###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범위 <input type="checkbox"/>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input type="checkbox"/>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 조정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5	10	3	일 반	3	7	12	10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신성장 ·원천기술	6	10	18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국가 전략기술	15	15	25	4	국가 전략기술	15	15	25	

<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우량채권 편입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li> </ul> </li> <li>○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li> <li>○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li> <li>○ (적용기한) '24.12.31. 까지 가입분</li> </ul>

<개정이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국채법」에 따라 신설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일정 기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해당 국채의 만기(10년, 20년)까지 보유(대통령령에 규정)</li> </ul> </li> <li>○ (특례내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li> <li>○ (적용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li> <li>○ (적용기한) '24.12.31. 까지 매입분</li> </ul>

<개정이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li> </ul>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80%)</li> </ul>	
구 분		구 분	
① 신용카드		① 신용카드	
15%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좌 동)	
총급여		7 천 만 원 이하	
공제한도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200
	도서공연등	-	

&lt;개정이유&gt;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lt;적용시기&gt; ’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

##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li> <li>-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15%</li> </ul> </li> <li>○ (한도) 500만원</li> <li>○ (적용시기) ‘25.1.1. 이후 지출한 기부금</li> </ul>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li> </ul>

&lt;개정이유&gt;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6)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p>□ 법인 종부세 과세체계</p> <p>① 일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li> <li>- 기본공제·세부담상한: 배제</li> </ul> <p>② 공공주택사업자 등*</p> <p>*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중증(종부세령 §4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li> <li>-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li> </ul>	<p>□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p> <p>① (좌 등)</p> <p>②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p> <p>*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중증(종부세령 §4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진세율: 주택 수 관계없이 0.5~2.7%</li> <li>-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li> </ul> <p>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li> <li>-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li> </ul>

<개정이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 2023. 3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재정재무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결정 결정 후 환급

-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① 정책 대상별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중

-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 또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

-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 '21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 예상

-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 ※ 국세인 법인세와 동반 개정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2%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 (차감계산식) 법인지방소득세액 - 차감액(법인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 상 자산상실비율)

## ② 분야별 감면 지원

- (지역경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일반투자)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사업양수 방식 취득) 취득세·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산업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조례 25% 추가 可), 재산세 35%	
물류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취득세 35%, 재산세 25% (조례 10%p 추가 可)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5년 간)	감면 연장
지방중소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
농지확대개발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임업후계자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산업혁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7)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기업부설 연구소	대기업, 중견기업	취득세·재산세 35% ※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15%p 추가 감면(현행 대비 +5%p)
	초기중견	취득세·재산세 50%	
	중소기업	취득세 60%·재산세 50%	

-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 또는 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지정)

-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물가안정)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농수 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취득세·재산세 100%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100%	
한국철도 공사 등	철도여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재산세 50%	감면 연장 및 신설 ※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취득세 25%)
	철도차량	취득세 50% (고속철도 : 25%)	
도시철도공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연장

- (사회복지)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 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
  -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토록 규정	지방세정책과
②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	지방세정책과
③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특례	○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	지방세정책과
④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지방세정책과
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지방세정책과
⑥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	지방세정책과
⑦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지방세정책과
⑧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 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지방세정책과
⑨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	○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지방세정책과

##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li> <li>-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li> </ul>	지방세 정책과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li> </ul>	지방세 정책과
③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하는 감정인의 현황조사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위해 감정인이 현황조사를 할 때 건물출입,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 권한 부여</li> <li>- 단,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li> </ul>	지방세 정책과
④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li> <li>-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li> </ul>	지방세 정책과
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li> <li>※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 등에게 매각사실 통지</li> </ul>	지방세 정책과

##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li> </ul>	부동산 세제과
② 과표상한제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표상한제)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5% 이내)를 설정('24년~)</li> <li>※ 현행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5년간 한시 운영 후 폐지('24년~'28년)</li> <li>○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현행 40~80%에서 30~70%로 범위 하향 조정</li> </ul>	부동산 세제과
③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li> <li>* 건축물, 토지, 토지 지목변경</li> <li>○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 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li> </ul>	부동산 세제과
④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개 구간 상향)</li> </ul>	지방소득세 비세제과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table><tr><th>과세표준</th><td></td></tr><tr><td>1,200만원 이하</td><td rowspan="4">➡</td></tr><tr><td>1,200~4,600만원</td></tr><tr><td>4,600~8,800만원</td></tr><tr><td>8,800만원~</td></tr></table>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400만원 이하</td><td>0.6%</td></tr><tr><td>1,400~5,000만원</td><td>1.5%</td></tr><tr><td>5,000~8,800만원</td><td>2.4%</td></tr><tr><td>(현행과 같음)</td><td>3.5~4.5%</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0.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현행과 같음)	3.5~4.5%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0.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현행과 같음)	3.5~4.5%																						
⑤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⑥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⑦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 ‘25년부터 시행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⑧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법인지방소득세율 0.1%p 인하(과표구간별)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d rowspan="5">➡</td><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td><td>2억원 이하</td><td>0.9%</td></tr><tr><td>2~200억원</td><td>2%</td><td>2~200억원</td><td>1.9%</td></tr><tr><td>200~3,000억원</td><td>2.2%</td><td>200~3,000억원</td><td>2.1%</td></tr><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d>3,000억원 초과</td><td>2.4%</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2%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2%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⑨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 제도 신설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⑩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가산세* 특례(면제) 적용기한을 '24년까지 2년 연장 *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 정책과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 제도과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특례* 신설 * (창업·사업장신설·사업장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지방세특례 제도과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③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감면율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10%p→ 15%p)	지방세특례제도과
④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감면율 확대 및 조례 감면 자율성 부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37.5→50%)하고,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	지방세특례제도과
⑤ 외투기업 감면 연장 및 조례 감면 자율성 부여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 가능(최대 15년) * (일반투자)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사업양수 방식 취득) 취득세·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지방세특례제도과
⑥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	◦ SR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도과
⑦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감면 연장·확대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감면 연장,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을 차등화(무료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	지방세특례제도과

##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	지방소득소비세제과
②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	◦ 납부 편의성 향상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3자 납부 규정 신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 신설 ※ 현재「국세징수법」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참고 2 -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 지원내용

### ① 정책 대상별 지원

대상	주요내용	소관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li> </ul>	지방세 특례 제도와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산세</b> (납부유예제도)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li> </ul>	부동산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조부모 부양 시 취득세 증과완화)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다주택 증과 완화</li> </ul>	부동산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산세</b> (조부모 부양 시 재산세 특례 적용)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p인하) 적용 확대</li> </ul>	부동산 세제과
근로소득자 / 영세 자영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득세</b>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조정(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li> </ul>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득세</b>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 신설 (1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li> </ul>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민세</b> (주민세 과세대상 완화) 개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li> </ul>	지방세 정책과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득세</b>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각 과표구간에서 세율 0.1%p씩 인하</li> </ul>	지방소득 소비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득세</b>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도입)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 일부를 차감</li> </ul>	



## ② 분야별 감면 지원

분야		주요내용	소관과
지역 경제	인구감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특례 신설 * (창업·사업장신설·사업장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사업전환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외국인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 가능(최대 15년)</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산업 혁신	기업부설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10%p→15%p)</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37.5→50%)하고,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물가 안정	한국철도 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교통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li> <li>• <b>취득세</b>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25%) 신설</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농수산물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사회 복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득세</b> <b>재산세</b> <b>주민세</b>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감면 연장,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 차등화 (무료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 취득세·재산세 25% (단, 조례로 50%p 추가 가능))</li> </ul>	지방세 특례 제도과

#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국세청, 2023. 3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sup>1)</sup> 중증장애인<sup>2)</sup> (가구원도 포함)
    - 1)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 ①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 ③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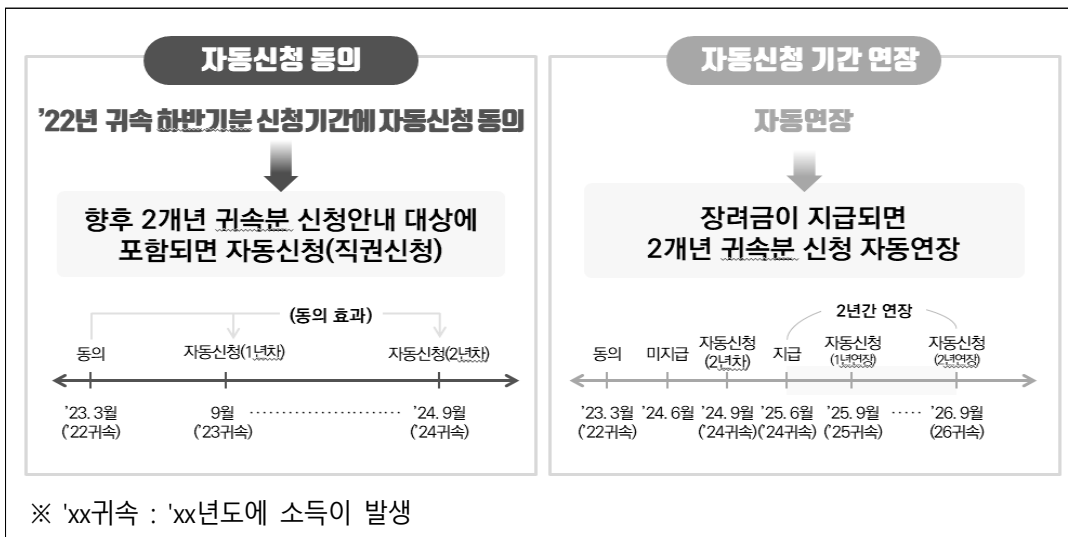
### ④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

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 3 자동신청 동의 효과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 (예시) '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



- (예시 설명)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5년 6월 하반기분·정산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 4

##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등

-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발송
  -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뜰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pc,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① '열람하기' 누르기
  - ② 본인인증(6자리 숫자)
  - ③ '신청하기' 누르기
  - ④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횟수 확대·상담인력 증원

○ 6회, 800명(22년) → 9회, 890명(23년)

구 분		운영기간	인원	구 분		운영기간	인원
①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2.~3.15.	140	⑥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1차)	10.25.~10.31.	5
②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	5.1.~5.31.	241	⑦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2차)	11.20.~10.25.	4
③	'22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14~6.23.	84	⑧	'23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8.~12.19.	63
④	'22년 귀속 정기지급	8.26.~8.31.	147	⑨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3차)	'24.1.22~1.26.	5
⑤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1.~9.15.	201	소 계			890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참고 1 -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소 득	신 청 기 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2022. 9. 1. ~ 9. 15.
	2022년 하반기	2023. 3. 1. ~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연간	2023. 5. 1. ~ 5. 31.



## 참고 2 -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현황

(만 명)

합 계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3	29	4

## 참고 3 - 자주 묻는 질문(FAQ)

## 사례 1 |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사례 2 |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 ~ '26.5월\*('25년 소득분까지)
-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례 4 |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 **사례 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례 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 **사례 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요?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 국세청, 2023. 3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검증 유형)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 ▶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 ② (사적유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 ▶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 ▶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 ▶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 ③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향후 계획)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 특히,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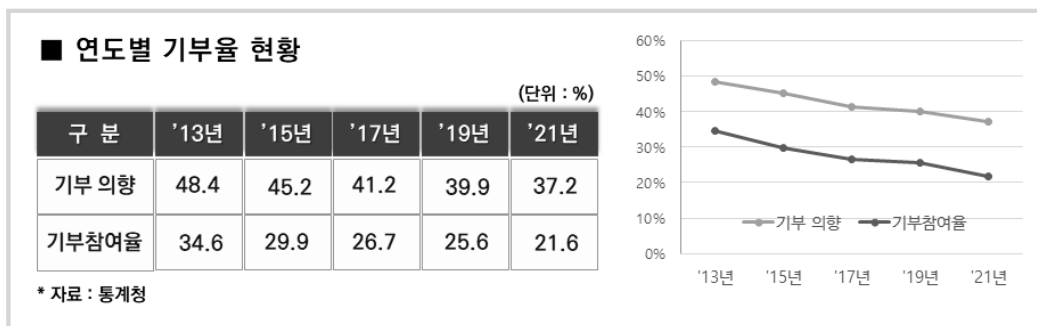
## 1

###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 \* (기부의회 감소) '13년 48.4% → '21년 37.2%, (참여율 감소) '13년 34.6% → '21년 21.6%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2 주요 세법위반 유형

-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회계부정 ·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 ① (변칙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 ② (증명서류 미수취)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자료와 결산공시 지출경비 내역 분석한 결과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계상
- ③ (지출경비 허위계상)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유용
- ④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출경비 중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경비 지출
- ⑤ (기부금 부당수령)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가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
  -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 ⑥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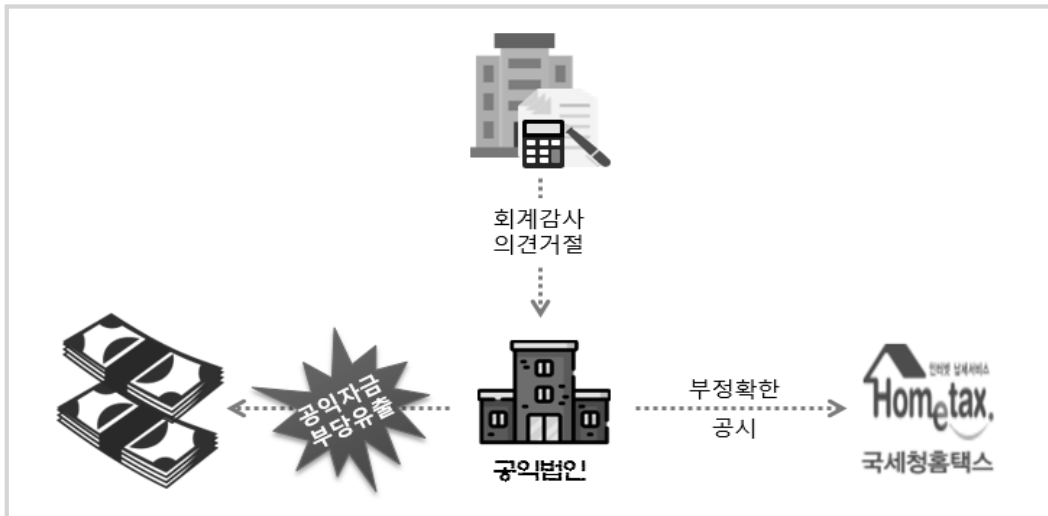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 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 형 ①]**  
**변 칙**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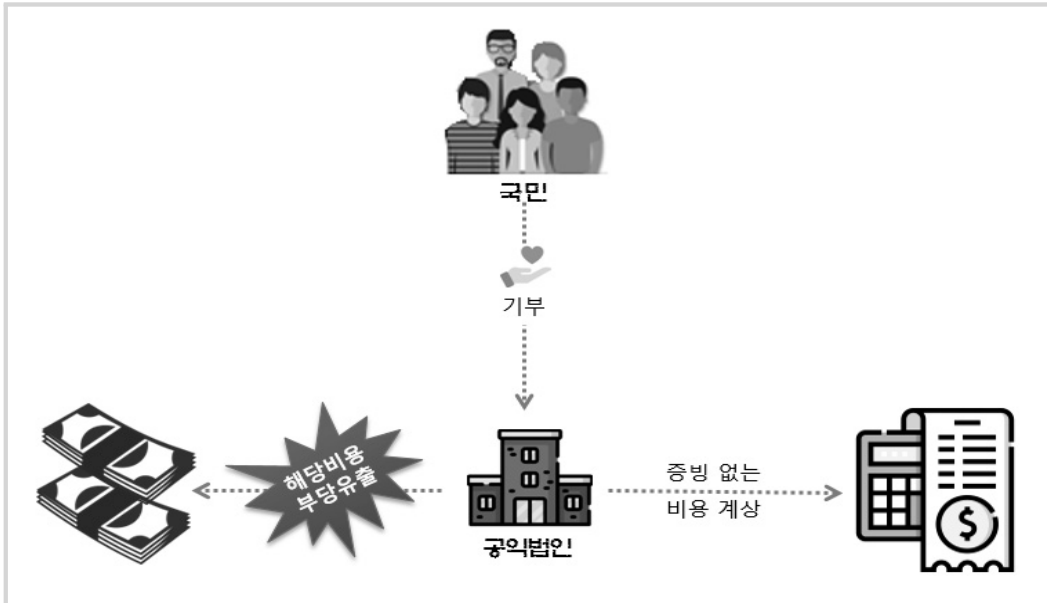
- (회계부정 혐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
  - (부동산 매각대금) A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 유용한 혐의
  - (미술품 매각대금) 또한, 공익법인의 매출계산서와 결산공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

□ 검증 방향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하여 공익자금 부당유출이 확인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유 형 ②]****증명서류  
미 수 취****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 주요 혐의 내용



- (장부 비치·보존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증명서류 미수취) B공익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수취 자료와 결산공시 자료의 지출경비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지출증명 서류 수취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

## □ 검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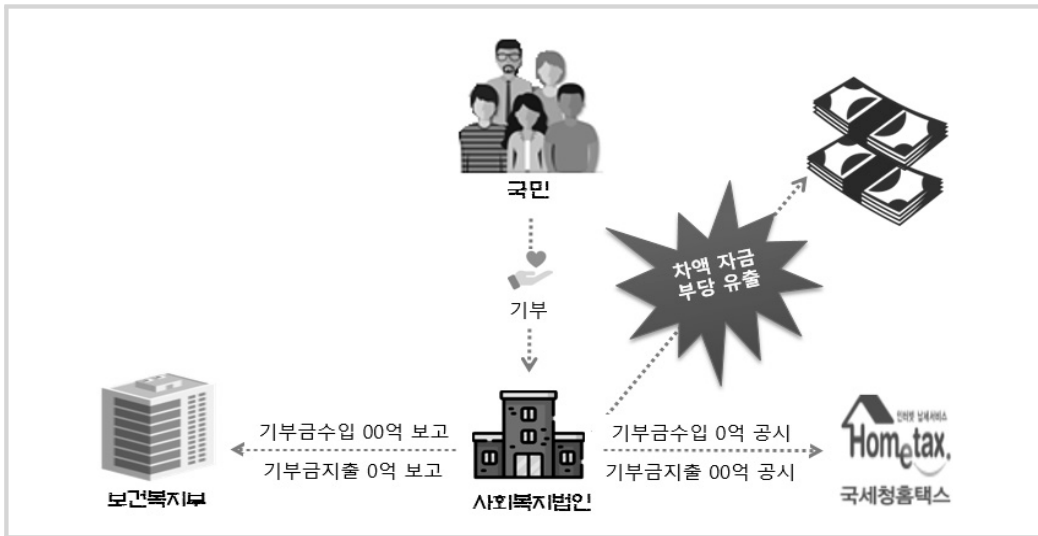
- 운영경비 실제 지출 여부, 공익목적사업 지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유 형 ③]

지출경비  
허위계상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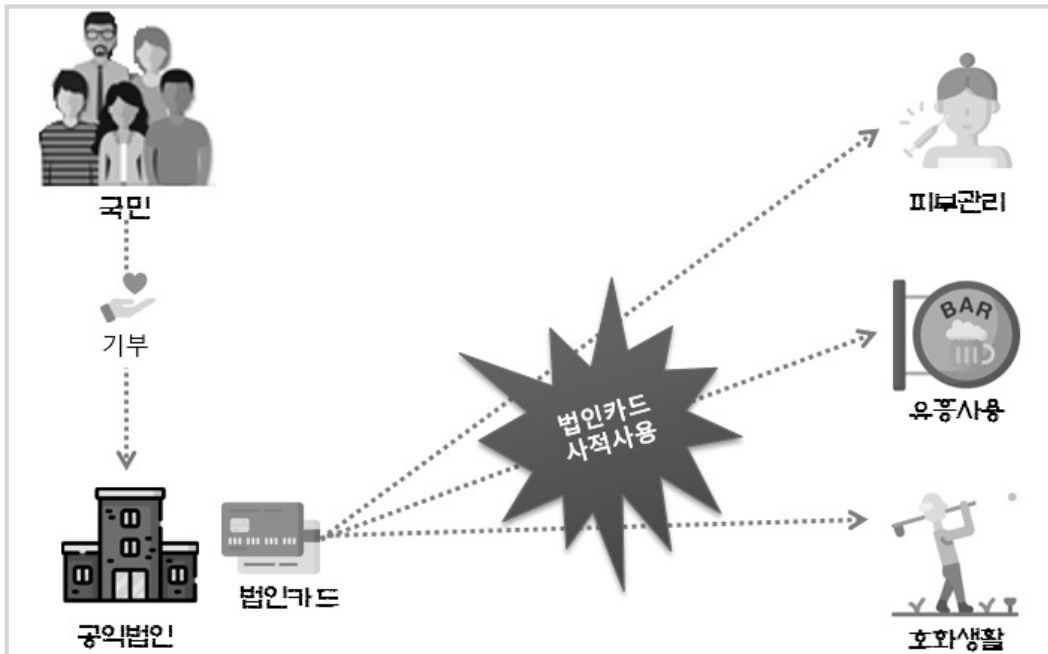
- (외부자료 수집 및 분석)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와 비교·분석
- (기부금 수입누락)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하여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 (지출경비 허위계상)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부금 지출로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 과다 계상한 경우로서 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

□ 검증 방향

-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 관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확인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유 형 ④]****법인카드  
사적사용****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 주요 혐의내용



-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경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 사례 확인
-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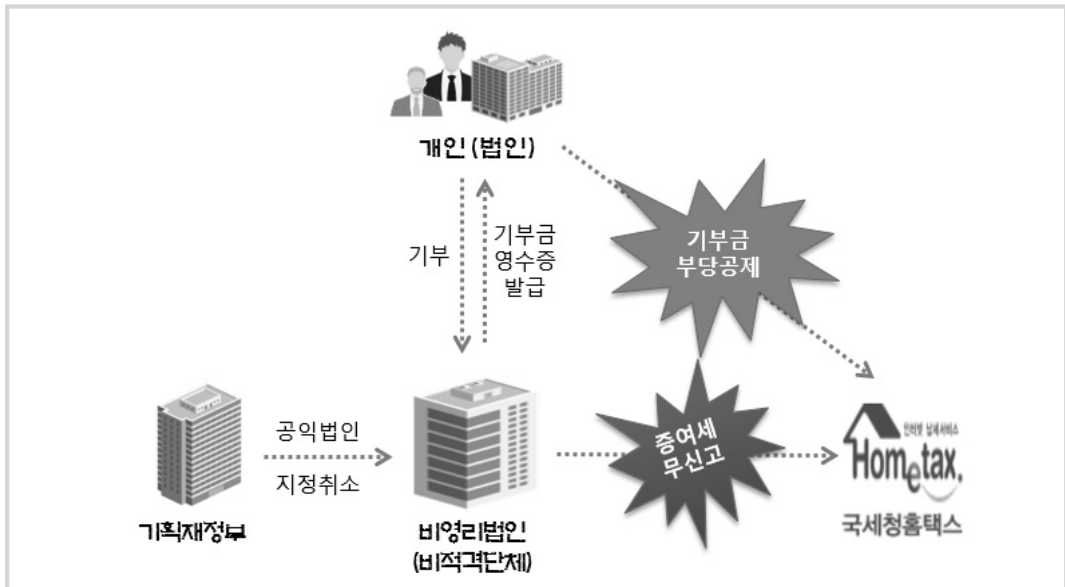
## □ 검증 방향

-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지출 목적을 확인하여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

**[유 형 ⑤]**

**기 부 금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부당수령**

□ 주요 혐의내용



- (기부금 부당 수령) 공익목적 위반 등의 사유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어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 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없음
  - E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어 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부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 누락한 혐의
- (기부자 부당공제)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게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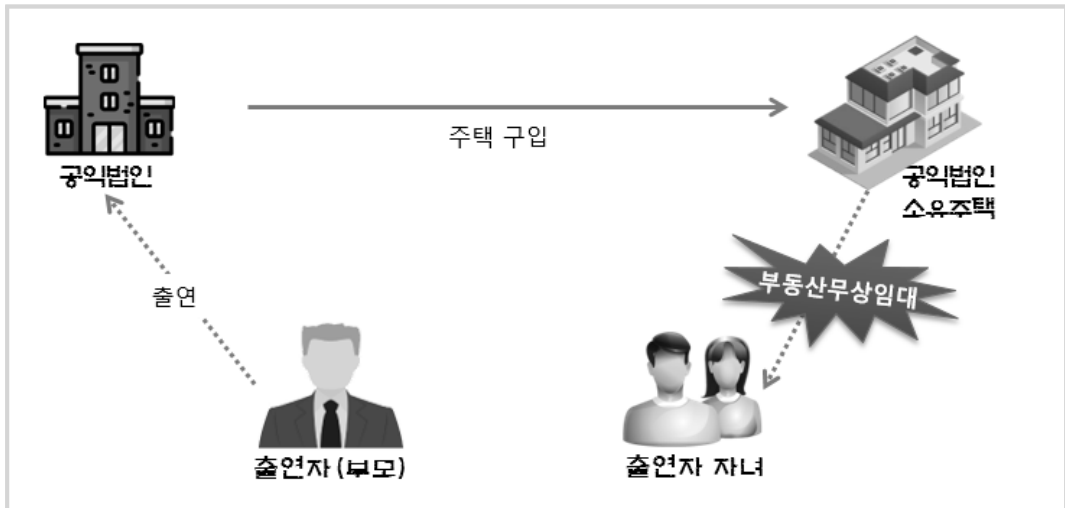
□ 검증 방향

- 비적격 단체의 기부금 모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공제 받은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과세

**[유 형 ⑥-1]**부당  
내부거래

출연자산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 주요 혐의내용



- (출연재산 무상임대) F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혐의
-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자 전·출입 이력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 확인
- 공익법인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 검토한바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

## □ 검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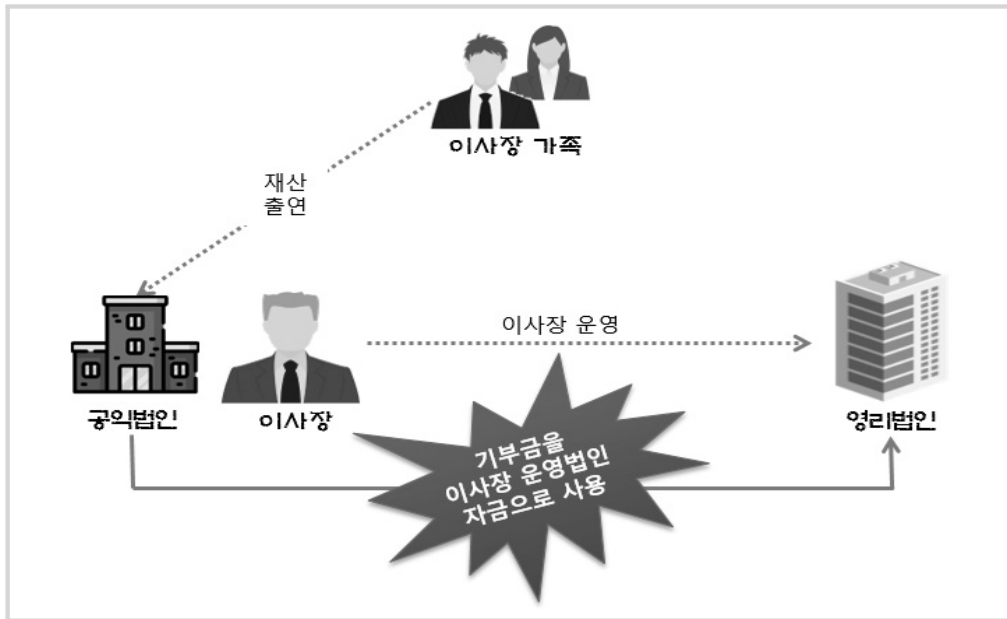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유 형 ⑥-2]

부당  
내부거래

기부금을 이사가장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여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
- (법인세 신고누락) 이사장이 공익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 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인세 신고 누락 혐의

□ 검증 방향

- 이사장의 공익자금 유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영리법인 이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 과세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 고용노동부, 2023. 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지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은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http://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추첨을 통해 해피머니상품권 등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처음 전자신고하는 경우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귀띔하며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별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http://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http://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방법은 사업장에 우편 발송한 안내문과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채널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 신고/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